

2014 지방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4.10.11 시행)

근래에 출제된 7급 시험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감난이도가 꽤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평이한 문제도 있었지만 참신하고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의 출제비중이 20%(4문항)에 불과했으며, 암기나 기출문제보다는 이론과 이해 위주로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5의 공직윤리의 본질, 문10의 국가재정법의 목적 등은 깊이 있고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의식 또는 행정학에 대한 철학적 깊이를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문11의 경우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의 구분을 묻는 신경향 문제였고, 문18의 점증주의의 본질, 문19의 정책학습의 유형, 문20의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되므로 자신의 절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인사(盡人)하셨으니 이제 대천명(待天命)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 해설은 급하게 업로드 하느라 정리가 되는 주요 지문위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며 10.13(월) 안으로 다시 자세하게 전지문 해설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중규 -

01. 공무원 경력개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적재적소의 원칙 ② 직급중심의 원칙
③ 인재양성의 원칙 ④ 자기주도의 원칙

(답) ② ②의 경우 직급이 아닌 직무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위가 요구하는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Plan : CDP)이란 조직속의 구성원이 경력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조정해나가도록 하는 인적자원관리 과정을 말한다.

● 경력개발의 원칙

적재적소의 원칙	직성·능력과 직무간 조화
승진경로의 원칙	적합한 승진경로모형 적용
인재양성의 원칙	외부영입이 아닌 인재내부양성 원칙
직무와 역량중심	직급이 아닌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에 중점
개발 및 공정경쟁	경력개발의 기회 균등 부여
자기주도의 원칙	경력목표와 경력계획을 스스로 수립

☞ 2014 선행정학 p.

02.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③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④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

(답) ④ ④는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정부의 원칙 (2010.5 전자정부법 개정)

종전	개정
·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전자적 처리의 원칙 <삭제> · 행정정보 공개의 원칙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 원칙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삭제>	·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신설> ·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운영의 원칙 <신설> ·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 당사자의 사에 반하여 사용 금지 <신설>

03. 행정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와 지식의 수집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② 작업과정에서 행정의 표준화를 통해 개인의 자의적 행위를 예방하여 확실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③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한다.
④ 행정 조직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답) ①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를 극복 또는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된다.

- ☑ ② [O] 표준화(SOP)를 통하여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③ [O] 가외성(redundancy)은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방안이다.
④ [O]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하여 분권화 등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04.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조기관은 위임·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
② 보좌기관은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기관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③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④ 보좌기관은 목표달성 및 정책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답) ③ ③은 반대이다. 보조기관은 계선의 하부조직(차관-실장-국장-과장 등)을 말하고, 보좌기관은 계선기관을 지원하는 참모조직(차관보, 담당관 등)을 말한다. 보조기관(계선)은 현실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보좌기관(참모)은 개혁적·이상적이다(③).

- ☑ ① [O] 보조기관은 정책결정을 돕기도 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기도하며, 경미한 결정은 위임받아 직접 결정하기도 한다.

- ② [O] 보좌기관(참모)은 결정권이 없는 만큼 책임도 없다.
- ④ [O] 보좌기관(참모)은 계선을 도와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05. 행정윤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윤리나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 ②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요구받게 된다.
- ③ OECD는 정부의 '신뢰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의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행정윤리는 특정 시점이나 사실과 관계없이 규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작동되어야 한다.

(답) ④ 행정윤리는 다분히 현실과 유리(괴리)된 규범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윤리란 특정지역의 풍토, 관습, 문화, 정서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특정 시기에 특정 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이다. 윤리란 제도나 법령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양식의 한 부분의 결과로써 성립된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는 추상적이고 가치내재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써 충분히 인식가능한 현실지향적인 개념이다.

- ☑ ① [O] 가치판단시에는 결과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대론(결과주의)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절대론(의무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 ② [O] 행정윤리는 일반사회윤리보다 더 높게 요구된다.
- ③ [O] 신뢰적자란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이후 OECD는 윤리 확립을 위해 신뢰적자 해결을 강조하였다.

06. 정책집행과 그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책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
- ㄴ. 프레스만(J.Pressman)과 윌다브스키(A.Wildavsky)는 정책집행연구의 초기 학자들로서 집행을 정책결정과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 ㄷ. 정책대상집단 중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할수록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ㄹ. 립스키(M.Lipsky)는 상황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로서 분명한 정책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②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 ㄱ [O] 성공적 정책설계를 위해서는 타당한 인과모형이 필요하다(Sabatier).

- ㄴ [O] Pressman & Wildavsky는 현대적 집행론(정책집행론, 1973)의 창시자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은 분라 독립된 과정이 아니라고 본다.
- ㄷ [O]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이 용이하고, 피해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이 어려워진다.
- ㄹ [O] Lipsky는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황적 접근방법을 주장하였다.

07.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에도 이용된다.
-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 ③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내부수익률(IRR)과 순현재가치(NPV)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답) ④ 내부수익률(IRR)이란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따라서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B - C)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 ☑ ① [O] 대안의 우선순위는 물론, 하나의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타당성유무도 판단 가능하다.
- ② [O] 할인율과 현재가치 및 타당성은 반비례한다.
- ③ [O] B/C > 1이거나 B - C > 0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개념	특징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 - C > 0이면 타당성 O (가장 일반적 기준)
비용편익비율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1이면 타당성 O (이차적·보완적 기준)
내부수익률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같게 해주는 때의 할인율	예상(기대)수익율. 내부수익률 > 기준할인율(시중금리)이면 타당
자본회수기간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다. (단,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낮을 때는 장기투자가 유리)

08.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립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③ 주민발의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은 지방의회에 이를 청구하게 되어 있다.

④ 주민소환제도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단, 비례대표의원은 제외된다.

(답) ③ 주민발의제도의 일종인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최종결정은 지방의회가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① [O] 주민투표의 개념으로 맞는 지문
 ② [O] 예산편성시 주민이 참여할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이지만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은 임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옳은 지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④ [O]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09. 커와 저미어(S.Kerr & J.Jermier)가 주장한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조화되고 일상적이며 애매하지 않은 과업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ㄷ. 부하의 경험, 능력, 훈련 수준이 높은 것은 리더십의 중화물이다.
 ㄹ. 수행하는 과업의 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가 빈번한 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답) ② ㄱ, ㄷ은 옳고, ㄴ, ㄷ은 틀리다. 대체물과 중화물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로 대체물은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중화물은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 ☑ ㄱ [O] 과업의 특성은 대체물이다.
 ㄴ [X] 대체물이 아니라 중화물이다.
 ㄷ [X] 중화물이 아니라 대체물이다.
 ㄹ [O] 과업의 특성은 대체물이다.

● Kerr & Jermier의 리더십대체물이론

대체물과 중화물	영향받는 리더의 행동		비고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부하의 특성	경험·능력·훈련	대체물	대체물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들)
	전문가적 지향	대체물	
과업의 특성	애매하지 않고 구조화된 일상적인 과업	대체물	
	과업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대체물	
	내적으로 만족되는 과업	대체물	대체물
조직의 특성	응집력이 높은 집단	대체물	
	공식화된 구조(명확한 계획·목표·책임)	대체물	중화물 (리더의 필요성을 감소시킴)
부하의 특성	조직의 보상에 대한 무관심	중화물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보상	중화물	
조직의 특성	비유연성(엄격한 규칙과 절차)	중화물	
	리더와 부하간 긴 공간적 거리	중화물	

10. 국가재정법 제1조에 규정된 재정운영 목적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운영의 형평성은 구성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재정의 투명성이란 재정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반 사항 및 결과를 일반 국민들의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재정 건전성은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운용을 의미한다.
 ④ 성과지향성이란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정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평가·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에도 적용된다.

(답) ①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 성과, 투명성만 규정되어 있지 형평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언급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2014.9)되어 있다. 만약 앞으로 형평성이 언급된다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재정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부문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답) ④ ④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성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과 집행의 분리, 책임운영기관 등 행정의 분절화를 강조하며,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 등 탈신공공관리론은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한다.

●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의 비교

비교구면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정부	정부 - 시장관계	시장지향주의 - 규제완화	정부의 정치·행정력 역량 강화

기능	의 기본 철학		- 재규제의 주장 - 정치적 통제 강조
	주요 행정가치	능률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등 전통적 행정가치 동시고려
	정부규모와 기능	정부규모와 기능 감축 - 민간화·민영화·민간위탁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공공서비스 제공의 초점	시민과 소비자 관점의 강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	민간 - 공공부분의 파트너십 강조
조직구조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조직구조의 특징	비계층적·유기적 구조, 분권화	제집권화 - 분권과 집권의 조화
	조직개편의 방향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행정의 분절화(예: 책임운영기관)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강조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증대
관리기법	조직관리의 기본철학	경쟁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분의 관리기법 도입	자율성과 책임성의 증대
	통제 메커니즘	결과·산출 중심의 통제	
	인사관리의 특징	경쟁적 인사관리, 개방형 인사제도	공공책임성 중시

12.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폭넓은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 ③ 계급제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용이하다.
- ④ 계급제에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답) ② ②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장점이다. 직위분류제는 직무나 직렬의 제한 때문에 폭넓은 인사이동이 불가능하고 전문행정가(specialist)가 양성된다.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적분류+횡적분류)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발달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
채용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영국·독일·일본
인간과 직무	직무중심	인간중심, 조직중심
시험·채용	합리성, 공정성(정원관리·사무관리 용이)	비합리성(업무분담의 비합리화)
일반·전문 행정가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보수의 형평화)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 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배치	비신축성(행정교류 곤란)	신축성(행정이동 용이)
행정계획	단기계획·단기능력·단기안목	장기계획·장기능력·장기안목
교육훈련	전문지식 강조(교육훈련 수요 파악 용이)	일반지식·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월거주의 초래 우려)	원활
개방·폐쇄	개방형(외부채용형), 교류형	폐쇄형(내부충원형), 비교류형
신분보장	약함(민주통제 용이)	강함(민주통제 곤란)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설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와의 관계		
인사운용의 탄력성(용통성)	낮음	높음(인사권자의 리더십 강화)
공직의 경직성	낮음	높음
몰입	직무몰입	조직몰입
창의력 개발 및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복잡한 조직	소규모 단순한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13.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 계획과 문제해결의 주된 방법은 집단적 과정이다.
- ③ TQM의 관심은 내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④ 산출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과정통제계획과 같은 계량화된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답) ③ TQM은 MBO 등과 달리 외향적(외부지향적)이어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도 평가한다.

14.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지된 비용(cost)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좁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이익집단정치라 한다.
- ㄴ. 기업가적 정치는 환경오염규제 사례처럼 오염업체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산된다.
- ㄷ. 대중정치는 한·약분쟁의 경우처럼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확보를 위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상황이다.
- ㄹ. 환경규제 완화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 정치의 상황이 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답) ②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

☑ ㄷ [X] 대중정치가 아니라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익집단정치의 특징에 해당한다.

ㄹ [O] 주의해야 한다. 환경규제의 경우는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어 운동가의 정치가 되지만, 반대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의 경우는 규제완화로 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므로 비용(손실, 피해)은 분산되고, 소수 오염업체는 이득을 보므로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고객정치 상황이 되어버린다.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15.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 이상의 주민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 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답) ① 500명이 아니라 300명 이상이다. 광역자치단체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은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이상이다.

16. 영기준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예산전략의 한계
 ㄴ. 정보획득의 애로
 ㄷ. 예산통제의 애로
 ㄹ. 경직성 경비로 인한 한계
 ㄴ. 재정구조의 경직화
 ㄷ. 비경제적 요인의 간과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ㄷ, ㄹ, ㄴ
- ③ ㄱ, ㄷ, ㄹ, ㄴ
- ④ ㄴ, ㄷ, ㄹ, ㄹ

(답) ① ㄱ, ㄴ, ㄷ, ㄹ은 옳고, ㄷ, ㄹ은 틀리다.

- ☑ ㄷ [X] 영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계획·통제기능의 연계를 강조한다.
- ㄴ [X]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17.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의 과제 중에서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과제는?

-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 ③ 민관 협치 강화
-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답) ② 설문은 정부3.0 중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의미한다.

●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3. 민관협치 강화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
5.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윈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 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18. 예산상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관계의 규칙성
- ②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 ③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 ④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답) ③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보통세나 일반회계 등)에서 점증주의는 타당하며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는 영역(목적세나 특별회계 등)에서는 예산이 대폭적인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점증주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 ☑ ② [O] 점증주의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 결정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범위 밖의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외부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범주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고 소관분야의 수요만을 반영하는 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1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행착오나 정책실패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②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가능성을 의미한다.
- ③ 사회적 정책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정책문제에 내재된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 ④ 정치적 학습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의 조정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목적들과 정부 행동들의 성격과 적합성까지 포함된다.

(답) ④ ④는 정치적 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에 해당한다.

● 정책학습

- (1) 정책학습의 의의 :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이란 정책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의 축적과 응용과정으로서 정책실패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성공을 유도하게 된다.

(2) 정책학습의 유형(P.May : 1992)

수단적 학습	정책개입이나 집행절계의 실행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집행수단이나 기법을 통한 학습
사회적 학습	정책관리 기법을 문제 그 자체의 핵심에 맞추는 일 뿐만 아니라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부활동의 본질과 타당성까지도 검토
정치적 학습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하고 그러한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한 정략으로서 정치적 변화를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한 학습

2013 7급 선행정학 387, 2015

20. 소방공무원의 선발시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검증방법에 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 내용과 난이도에 있어 동질적인 ㉠, ㉡책형을 중앙소방학교 교육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게 한 후, 두 책형의 성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② 내용타당성 - 소방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그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발시험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③ 기준타당성 - 소방직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3개월 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여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④ 구성타당성 - 지원자의 근력·지구력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만든 시험방법을 통해 측정한 점수와 기존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답) ③ ③ 기준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 중 재시험법에 해당한다. 기준타당도는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 시험의 효용도

- ① 타당도 - 측정하려는 것(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정도
- ② 신뢰도 - 시험이 측정도구(형식, 시기, 장소 등)로서 가지는 일관성 (타당도의 필요조건). 검증방법은 동질이형법, 제시시험법, 반분법 등이 있음
- ③ 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 ④ 난이도 - 쉬운 문제와 어려운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변별력)
- ⑤ 실용도 - 실시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 타당도의 종류와 검증방법

구분	개념	판단기준	검증방법
기준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나 실적' 예측 여부	'시험성적 = 근무성적'	예측적 검증 (합격자) 동시적 검증 (채직자)
내용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 측정 여부	'능력요소 = 시험내용'	내용분석
구성타당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관련된다고 믿는 '이론적 구성요소' 측정 여부	'이론적 구성요소=시험내용' 부합여부	논리적 추론